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5. 11.(화) 10:00	배포일시	2021. 5. 11.(화) 08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(044-215-5740)	담당자	김영웅 사무관 ssuper84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 박재진 (044-215-5130)		김선영 사무관 ksunny3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김완수 (044-215-53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		한재수 사무관 han142857@korea.kr
			조진희 사무관 jhcho0629@korea.kr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1년 5월호 (‘21.3월말 기준)

- ☐ 기획재정부는 「월간 재정동향」*을 확대 개편하여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5월호(3월말 기준)를 발간
* 재정정보·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'14년부터 월단위 재정통계를 제공
 - ☐ 개편된 5월호부터는 재정통계 범위에 국민경제·사회활동에
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,
국채수요 및 발행금리 등 국채시장의 동향을 추가하고,
 - 재정지표의 추세·변동사유 분석 등을 포함함으로써, 국민이
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
 - ☐ 아울러, 재정이슈 파트를 신설하여,
 - 최근 국내외 재정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
및 정책담당자 분석 자료*를 수록하여,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
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* ①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
②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
③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
- 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, 코로나위기
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
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
평가하였음
 - 아울러, 이번에 개편된 「월간재정동향 및 이슈」를 통해 국민·
전문가 등 수요자에게 재정정보를 보다 풍부하고 알기 쉽게
제공하고, 재정이슈·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
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
['21년 1분기 재정운용동향]

< 요약 >

- ◇ 코로나 피해 경감,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
집행결과,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증가(+17.4조원)하였고,
- 1분기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전년대비
더 큰 폭으로 증가(+32.6조원)함에 따라,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(‘20.1분기 △45.3 → ‘21.1분기 △30.1조원, 전년대비 +15.2조원)
- ☐ (총수입) 1분기 총수입(152.1조원)은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
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.5%p 증가
* 3월 총수입(누계, 조원) : 152.1(전년비 +32.6), 진도율 : 31.5%(+6.5%p)
-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
(+19.0)하였고, 세외수입(+1.5)·기금수입(+12.1조원)도 모두 증가*
* 3월(누계, 조원) : <국세>88.5(+19.0) <세외>10.1(+1.5) <기금>53.5(+12.1)
- ☐ (총지출)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,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
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(182.2조원) 진도율은 전년대비 21%p 증가
* 3월(누계, 조원) : <총지출>182.2(+17.4) <예산>123.1(+2.5) <기금>59.1(+14.9)
- ☐ (수지)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수지는
전년대비 개선 (‘20.1분기 △45.3 → ‘21.1분기 △30.1조원, +15.2조원)
* 3월 통합수지(누계) : △30.1조원(+15.2), 중앙정부채무 : 862.1조원

< 주요항목별 진도율(‘21년 1분기) >

총수입	국세수입	총지출	관리대상사업
31.5% (전년비 +6.5%p)	31.3% (전년비 +6.9%p)	31.8% (전년비 +2.1%p)	35.7% (전년비 +0.4%p)

□ **(총수입)** 1분기 총수입(152.1조원)은 소득세·법인세 등 국세 증가,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.5%p 증가

* 국세(+19.0) 및 세외(+1.5)·기금수입(+12.1조원) 모두 전년대비 증가

❶ (국세, 88.5조원) 전년대비 진도율 6.9%p 증가(+19.0조원)

- (소득세) '20년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*에 따른 유예분 납부, 부동산 거래량 증가** 등으로 전년대비 6.4조원 증가

* '20.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

*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): ('19.11월~'20.2월) 42.7 → ('20.11월~'21.2월) 43.3 <+1.7%>

- (법인세) 기업의 '20년 영업이익 증가* 등으로 전년대비 4.8조원 증가

*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 개별기준): ('19) 56.3 → ('20) 67.5 <+19.8%>

- (교통세 등) '20년 정유업계 세정지원*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, 증권거래대금 증가** 등으로 전년대비 4.3조원 증가

* '20.11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유업계 대상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

** ('19.12월~'20.2월) 704.5 → ('20.12월~'21.2월) 2,131.6조원 <202.5%>

❷ (세외수입, 10.1조원) 한은잉여금 증가, 우정사업수입 증가로 1분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진도율 2.7%p 증가(+1.5조원)

❸ (기금수입, 53.5조원) 1분기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 수입(+10.9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.4%p 증가(+12.1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C)	3월 (누계 D)	진도율		추경 (G)	3월 (H)	3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3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	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추경 (J-E)	결산 (J-F)		
□ 총수입	470.7	478.8	41.8	119.5	25.4	25.0	483.0	55.0	152.1	31.5	13.3	32.6	6.1	6.5		
◇ 국세수입	279.7	285.5	22.8	69.5	24.9	24.3	282.7	30.7	88.5	31.3	7.9	19.0	6.4	6.9		
○ 일반회계	271.9	276.3	22.3	67.9	25.0	24.6	274.0	29.9	86.1	31.4	7.6	18.2	6.4	6.8		
- 소득세	88.5	93.1	3.2	22.2	25.1	23.9	89.8	4.8	28.6	31.9	1.6	6.4	6.7	8.0		
- 법인세	58.5	55.5	13.4	15.4	26.3	27.7	53.3	17.3	20.2	37.9	3.9	4.8	11.6	10.2		
- 부가가치세	64.6	64.9	1.3	14.9	23.1	23.0	66.7	1.4	17.6	26.4	0.1	2.7	3.3	3.4		
- 교통세	15.5	13.9	1.2	3.8	24.3	27.0	15.7	1.7	4.7	30.1	0.5	1.0	5.7	3.1		
- 관세	7.7	7.1	0.4	1.7	21.8	23.8	8.3	0.7	1.7	20.7	0.3	0.0	△1.1	△3.1		
- 기타	37.2	41.8	2.8	9.9	26.7	23.8	40.2	4.0	13.3	33.0	1.1	3.3	6.3	9.2		
○ 특별회계	7.8	9.3	0.5	1.6	20.3	17.2	8.7	0.8	2.4	27.1	0.4	0.8	6.8	9.9		
◇ 세외수입	29.1	26.9	1.9	8.6	29.5	31.9	29.3	2.0	10.1	34.6	0.1	1.5	5.1	2.7		
◇ 기금수입	161.9	166.2	17.1	41.4	25.6	24.9	171.0	22.4	53.5	31.3	5.2	12.1	5.7	6.4		

□ **(총지출)**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, 고용·생활안정, 방역예방·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대비 2.1%p 증가(182.2조원, +17.4조원)

❶ (예산) 특고·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 지원금(+0.5조원), 저소득·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(+0.2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.3%p 증가(+2.5조원)

❷ (기금) 코로나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적극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(+6.1%p)으로 증가(+14.9조원)

➡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경기 회복에 기여(1/4분기 실질 GDP 성장률 1.6%, 정부기여도 0.3%p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당월 C)	3월 (누계 D)	진도율		추경 (G)	3월 (당월 H)	3월 (누계 I)	진도율 (J=I/G)	증감		3월 (H-C)	누계 (I-D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	
◇ 총지출	554.7	549.9	60.8	164.8	29.7	30.0	572.9	72.4	182.2	31.8	11.6	17.4	11.6	17.4
○ 예산	377.5	374.4	40.3	120.6	31.9	32.2	382.3	42.3	123.1	32.2	2.0	2.5	2.0	2.5
- 일반회계	323.5	320.8	32.8	100.7	31.1	31.4	321.6	33.6	102.3	31.8	0.8	1.5	0.8	1.5
- 특별회계	54.0	53.6	7.5	19.8	36.7	36.9	60.8	8.7	20.8	34.2	1.2	1.0	△2.5	△2.5
○ 기금	177.3	175.2	20.5	44.2	25.0	25.3	190.6	30.1	59.1	31.0	9.6	14.9	9.6	14.9
(사회보장성기금)	61.2	59.1	5.0	14.3	23.3	24.1	62.9	6.0	16.8	26.7	1.0	2.5	3.4	3.4
○ 세입세출외*	-	0.4	0.0	0.0	-	1.7	-	0.0	0.0	-	△0.0	△0.0	-	-

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※ (집행관리 대상사업, 343.7조원) 1분기 집행률은 35.7% (122.6조원)로 전년대비 0.4%p 증가

○ 특히, 일자리(40.1%, 5.5조원), SOC(37.5%, 20.3조원) 등 국민 생활 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을 달성

(단위: 조원, %)

구분	관리대상 규모	1분기 집행실적(A)	(%)	조기집행 목표(B)	(%)	진행률 (A/B)
일자리	13.6	5.5	40.1	9.1	67.0	60.4
SOC	54.2	20.3	37.5	33.6	62.0	60.4
생활SOC	11.0	3.8	34.3	7.2	65.5	52.8
한국판 뉴딜	21.0	7.6	36.1	14.7	70.0	51.7

- **(재정수지)** 세수 등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개선 ('20.1분기 △45.3 → '21.1분기 △30.1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0년						'21년(잠정)				전년동기대비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당월 C)	3월 (누계 D)	진도율		추경 (G)	3월 (당월 H)	3월 (누계 I)	진도율 (I=I/G)	증감		진도율 (J-E)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3월 (H-C)	누계 (I-D)	
◇ 총수입(A)	470.7	478.8	41.8	119.5	25.4	25.0	483.0	55.0	152.1	31.5	13.3	32.6	6.1
◇ 총지출(B)	554.7	549.9	60.8	164.8	29.7	30.0	572.9	72.4	182.2	31.8	11.6	17.4	2.1
◇ 통합재정수지 (C=A-B)	△84.0	△71.2	△19.0	△45.3			△89.9	△17.4	△30.1		1.6	15.2	
◇ 사회보장성 기금수지(D)	34.6	40.8	5.3	10.0			36.5	8.9	18.5		3.6	8.5	
◇ 관리재정수지 (E=C-D)	△118.6	△112.0	△24.4	△55.3			△126.4	△26.3	△48.6		△1.9	6.7	

- **(국가채무)**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.4조원으로, 年 발행한도 (186.3조원)의 27%를 평균조달 금리 1.59%로 안정적 소화

* 1분기 국가채무 잔액: 862.1조원(국고채 769.3, 주택채 79.3, 외평채 9.8 등)
(21.3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: 938.4조원)

- 외국인·보험사·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 지속되고 있으며, 특히, 외국인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 국고채 매수

*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'18.1/4)+3.7 ('19.1/4)△2.0 ('20.1/4)+8.6 ('21.1/4)+11.0

** 3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.2%

[1분기 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]

- ◇ 1분기에 **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, 고용충격 완화, 방역강화** 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,
- 청년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개선, 백신접종·진단·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

□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사업

- (소상공인 지원) 집합금지·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플러스자금 3월말 3.3조원* 지급 완료

* 5월10일 기준, 신속지급DB 대상자 301만명 중 272만명(약 90%)에게 4.55조원 지급 완료

- (고용취약계층* 지원)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 등의 고용·생활 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0.5조원 집행

*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 등

※ 1분기에 고용취약계층(특고, 프리랜서 등 83.4만명)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, 코로나 피해계층 생활안정에 기여

□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지원

- (구직급여)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 3.2조원 지원(전년대비 +0.7조원)으로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 지원(96.4만명 대상)

- (고용장려·유지) 청년층 추가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0.7조원(4.2만명), 고용유지지원금 0.4조원 등 일자리 안정화 사업 적극 집행(총 23.9만명)

※ 수출·내수 개선 및 다각적 정책 노력으로 3월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 전환
-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0.11)△24.3 (12)△30.1 ('21.1)△31.4 (2)△14.2 (3)14.8

□ 코로나 방역 강화 대응

- (코로나19 예방접종)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센터 운영 및 접종시행비 등 0.1조원 적극 집행
- (방역대응·손실보상 등)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환자 진단-격리-치료 및 생활지원에 0.7조원 집행

※ 중증환자 발생 감소, 작년 12월에 비해 위중증률·치명률 모두 감소('21.4.23, 복지부)

- 위중증률 : ('20.12월) 3.3% → ('21.1월) 2.5% → ('21.2월) 2.3% → ('21.3월) 1.6%
- 치명률 : ('20.12월) 2.7% → ('21.1월) 1.4% → ('21.2월) 1.3% → ('21.3월) 0.5%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호(배포용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5월호 주요재정 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」(붙임)에 게재

①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(류덕현 교수)

- ① (해외사례)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유럽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,
- 위기 이후 '경제회복 + 재정안정화 노력'이 병행된 독일은 재정건전성이 회복된 반면,
 -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, 경제회복이 지연된 국가(프랑스, 스페인 등)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속증가

< 주요국 재정운용 사례 >

국가	재정운용 사례
독일	안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건전화 노력(준칙 도입, 세원 발굴 등) 수행 → 부채 수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* 부채비율: ('08) 65.5% → ('10) 82.3% → ('19) 59.6%
프랑스	세입확충·지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, 경제회복 지연으로 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 * 부채비율: ('08) 68.8% → ('10) 85.3% → ('19) 98.1%
스페인·이탈리아	남유럽 경제위기를 맞으며 부채비율 지속 증가 * 부채비율: 스페인 ('08) 39.7% → ('10) 60.5% → ('19) 95.5% / 이탈리아 ('08) 106.2% → ('10) 119.2% → ('19) 134.6%

- ② (시사점) 성장을 조기회복이 중요*한 만큼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적극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

* 성장률이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재정을 통한 성장을 회복 필요

-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할 전제로 재정건전화 노력 병행 필요

* 독일의 재정건전성 회복의 이면에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 노력 외에도 '10년과 '11년 4.0% 수준의 실질성장률 실현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는 것도 재정건전화의 성공을 이룬 주요한 요인

- ➡ 경기회복·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 하되,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률 상승에 따른 세입확충·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병행 필요

②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(조세연 구원모 선임연구원)

- ① (재정 기초) 대규모 경기부양책, 확장적 재량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

- (대규모 경기부양책)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, 세 차례*에 걸쳐 GDP 대비 26% 규모 지출 발표

* 1차(구조계획) \$1.8조(GDP 대비 8%), 2차(인프라계획) \$2.3조(GDP 대비 10%)
3차(가족계획) \$1.8조(GDP 대비 8%) → 총 GDP 대비 26%

< 바이든 정부 주요 재정정책 >

	미국 구조계획법 (American Rescue Plan)	인프라 계획 (American Jobs Plan)	가족계획 (American Families Plan)
규모	\$1.8조(GDP 대비 8%)	\$2.2~2.3조(GDP 대비 10%)	\$1.8조(GDP 대비 8%)
주요 내용	•실업수당 지급 •제3차 재난지원금 •대규모 세액공제	•청정에너지 인프라 •교육·보육·돌봄 •제조업·R&D 인프라 •운송·주택 인프라	•교육 등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•가정 및 아동 관련 지원 중심
재원 조달	-	•법인세 개혁 중심	•고소득층 개인소득세 조정 •조세격차 감축 등

- ('22년 대통령 예산안) '22년 재량지출 계획 규모는 전년(1조 4,044억달러) 대비 8.4%(1,180억달러) 증가한 1조 5,224억달러 규모

- (향후전망)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0년 후 2배까지 상승 전망(CBO, '21.3월)

* 재정적자(GDP대비%): ('19년) 4.6% ('20년) 14.9% ('21년) 10.3%
국가채무(GDP대비%): ('20년) 100% → ('51년) 202%

- ② (시사점) 경제·사회구조 전환기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, 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 추진

- 기후변화 대응, 교육·보육 등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뉴딜과 유사
- 중장기 인프라투자를 위해서는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논의 필요

③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(기획재정부 박재진 국채과장)

- (도전) 코로나 19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* → 국채 발행물량의 원활한 소화와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도전에 직면

*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(조원) : ('18)97.4 ('19)101.7 ('20)174.5 ('21한도)186.3

- (대응) 시장의 안정적 관리 + 국채시장 역량강화

- ①시장 여건에 따라 시기별·연물별 발행물량 탄력 조정,
②시장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실시 등 시장 안정에 총력
- 지난해 국채시장 전반에 걸쳐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「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」 마련하여,
- ①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②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③안정적 국채 시장 운용 ④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 추진 중

「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」 주요내용

4대 전략	주요 과제
①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고채 전문딜러(PD)에 대한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중위권 PD까지 금융지원 대상 확대 등 ▶ 자산형성 등을 위한 '개인투자용 국채' 도입
② 효과적 공급전략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고채 2년물 신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1.2월부터 매월 발행 ▶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*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통상적 입찰방식이 아닌 사전 공고된 금리로 일정물량을 발행
③ 안정적 국채시장 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 자동호가시스템 구축 ▶ 시장안정을 위한 국고채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시스템 마련
④ 전문적 지원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채 관련 주요 현안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위한 「국채연구자문단」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DI·금융연·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, 시장참여자 등 참여 ▶ 국채 정보 효율적 활용 위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

⇒ 향후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기대